

영호남 시·도지사 “지방시대 실현하자”

울산서 17회 협력회의 개최
복수주조제 도입 등 공동성명
김영록 제안 경제공동체 용역도

영호남 시도지사들이 ‘복수주조제 도입’ 등 지방시대 실현에 뜻을 모았다.
23일 광주·전남도에 따르면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이날 오후 울산에서 제17회 협력회의를 열고,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광주시와 전남도, 부산시, 대구시, 울산시, 전북도, 경북도, 경남도 등 8개 시도지사가 참여한 협의체다.
이들은 이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가 자립할 실질적 권한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공동 정책 협력과제 8건과 영호남 광역철도망 및 광역도로망 구축을 공동성명서에 담았다.
공동 정책 협력과제는 ▲4도(都)3촌(村) 생활양식을 반영한 복수주조제 도입 등 제도 개선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공론화 ▲지역



23일 울산시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7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영호남 시도지사들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김두겸 울산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

자원시설세 세입 확충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강화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 ▲출산장려금 국가지원사업 전환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분권강화(소방인건비 국비지원·자치경찰제 이원화) ▲남해안권 비행자유구역 지정 등

영호남 광역철도망 구축은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와 전라선 고속철도·서해안 고속철도건설 등 10개 노선이며, 영호남 광역도로망 구축

은 남해·여수 해저터널·무주·대구(성주) 고속도로 2개 노선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4도 3촌 등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주말주택 활성화와 독일과 같은 ‘복수주조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공동협력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어 “수도권에 대한 남부권 영호남 경제공동체 구축이 필요하다”며 “경제동맹 차원에서 공동프로젝트를 공동용역으로 발굴하자”고 제안해 긴급 공동협력과제로 채택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올해 전남에서 열리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제43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를 비롯해 제14회 광주비엔날레 등 시도별 주요행사 13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상호 지원과 참여를 약속했다. 시도지사들은 차기 의장으로 김관영 전북지사를 선출했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 지역 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체제 유지 등 상생협력을 위해 1998년 구성됐다. 8개 시도가 공동 설립한 ‘동서교류협력재단’을 통해 영호남 친선 교류, 민간단체 협력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근산 기자

광주·전라 ‘무당층 지지율’ 정치권 촉각

일부 조사서 민주당에 앞서
“표본적어 무의미” 지적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라지역의 무당층이 민주당 지지율을 앞선 결과가 나오면서 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3월 3주차)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광주·전라지역은 무당층이 39%로 민주당 지지 38%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12%, 정의당은 7%를 기록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3월 들어 민주당 지지율은 큰 폭의 하락 곡선을 그렸다.
3월 1주차 광주·전라지역 민주당 지지율은 51%를 기록했으나 2주차에는 48%로 3% 떨어졌고 이번 3주차 조사에 30%대로 주저앉았다.
무당층은 3월 1주차에 27%였다가 2주차에는 24%, 3주차에 39%까지 치솟

았다.
한국갤럽과 달리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무당층이 여전히 10%를 넘지 못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17일 발표한 조사에서 광주·전라지역 무당층은 9%였고, 지난 16일 나온 미디어토마토 조사도 광주·전라지역 무당층은 7.2%였다.
여론조사마다 이처럼 결과가 다르긴 하지만 ‘서진 공략’에 나선 국민의힘은 무당층 증가 수치를 매우 의미있게 받아들이고 있다.
국민의힘 광주시장 관계자는 “민주당이 보여준 이재명 방탄 국회와 현 정부 들어 민생을 외면한 민주당에 실망한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층이 국민의힘으로 오라는 보장은 없지만, 지역 발전을 위한 대안 정당으로서 중도 표심을 잡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년 전만 해도 70%를 넘나들던 정당 지지율이 40% 선까지 무너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예외주시하는 분위기다. /김용현 기자

민주당 광주시장 관계자는 “당 대표 사법 리스크 등 민주당으로서는 악재가 겹쳐 지지율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윤석열 검찰 정부의 폭주를 막고, 민생도 챙기는 야당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면 지지율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신뢰도가 매우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론조사 기관마다 무당층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도 표본이 적은 탓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는 시각이다. 통상 전국여론조사는 1,000명 이상을 표본으로 조사를 하는데 지역별로 보면 표본이 100여명 안팎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오승용 김관영시장은 “표본이 적다 보면 오차 범위가 커져 통계학적으로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며 “일정한 흐름을 보면 무당층의 증감 추이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당분간 여론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신정훈 “나주·화순 배수개선 국비 343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의원은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배수개선’ 신규착수 및 기본조사 사업비 34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배수개선 사업은 홍수기에 상습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습해가 심한 농경지에 배수장·배수문을 설치하고 융·배수로를 정비, 농작물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정된 나주 영산지구(104억1,600만원),

화순 도곡2지구(82억9,400만원)의 경우 상습 침수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했던 곳이다. 이번 지원사업으로 324ha에 달하는 농경지가 혜택을 받게 된다.
신 의원은 “이번 배수개선 사업 예산 확보로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영농환경이 개선돼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광주의료원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시민운동본부 기자회견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광주의료원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올바른 광주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부는 2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는 광주의료원 설립 문제에 대해 타당성 재조사 통과로 응답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병상 공급과 이용률이라는 시장 논리로 현재의 병상

보다도 축소시켜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시장 논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버린 것에 대해 규탄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엄중히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의료원 건립사업은 대규모 감염병 관리나 지역 보건사업 추진 효과 등 편익을 추가로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 사례지만 현재 경제적 타당성이 기준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감염병 대응 등과 같이 필수로 제공을 목표로 하는 공공병원의 설립을 수익성에 기초한 ‘비용 대비 편익’의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당시 광주에는 지방의료원이 없어 코로나19 확산 등 의료재난상황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은 필수 의료를 시장에 맡겨두면 실패할 수 밖에 없어 공공의료를 늘려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시켰다”며 “정부는 경제성 잣대를 거두고 공공병원 확충·강화를 바라는 시민의 절박한 요구에 타당성 재조사 통과로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김용현 기자

“광주전남연구원 분리, 재검토해야”

광주지역 시민단체 촉구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진보연대·광주여성단체연합 등 지역 시민단체는 23일 광주전남연구원의 재분리를 원점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연구원 이사회가 양 시도의 재분리 각본에 맞춰 단순 거수기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고, 심사숙고해서 분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광주시는 공청회를 개최한

지 5일 만에 연구원 이사회에 ‘재분리’ 의견을 제출하고, 열흘 만에 이사회를 통해서 속전속결로 마무리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마저 요식행위로 전락시킨 광주시의 행태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혜린 기자

www.518run.com

5·18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

23회 5·18 마라톤대회

일시 2023. 5. 20 (토) 집결 08:00 출발 08:30

장소 광주 승촌공원 운동장 (승촌보 내)

종목및참가비 5.18km 10,000원 10km, 하프코스 30,000원

접수기간 2023년 2월 20일(월) ~ 2023년 4월 21일(금)

접수방법 전화, 팩스, 518run.com, 0518run@hanmail.net

문의 TEL (062) 720-1099 FAX (062) 720-1020 카카오톡 ID : jndnews

주최 518기념재단 전남매일

후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 대한체육회 광주광역시체육회 광주광역시체육회 광주은행 518구속부상자회 전라남도지부 골드메시(주)

승촌보운동장 5km, 10km, 하프코스 출발/도착

승촌보문화관

행랑장

승촌보 5km 반환점

하프1차 반환점

하프2차 반환점

10km 반환점

5km코스 10km코스 하프코스